

함으로써 전세계적 기조에서 벗어나는 결과를 낳고 있다. 하지만 가산율 적용 폐지 및 감면 제도가 도입된다면 상술했다시피 단기적으로는 세수가 줄어들지만 그 마이너스 효과는 미미할 것이고, 오히려 중장기적 비용절감과 환경보호에 따른 공공편익 극대화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과세정책과 에너지정책, 환경정책, AI 활성화정책 간 일관성을 확보하여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 그리고 감면 제도 도입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IBS 기술 장려 정책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 V. 결론

오늘날 건축 환경은 단순한 공간 제공에서 벗어나, 에너지 효율성, 안전성, 편의성 등을 포괄하는 스마트 빌딩 중심으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인텔리전트 빌딩 시스템(IBS)은 건축물의 가치를 높이고, 사용자 중심의 쾌적한 생활·업무 환경을 조성하는 핵심이자 이제는 기본적인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조세제도는 IBS의 공익성과 기술적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과세표준 가산율의 적용을 통해 IBS 도입을 저해하는 역기능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에너지 절감과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지향하는 국가 정책과 괴리된 조세운용이며, 성실 신고 납세자에게 매우 불합리한 조세제도이므로 조속한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IBS 설비의 재산세 과세표준 가산율 폐지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IBS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규정 신설
- 국토교통부의 인증제도와 조세제도의 연계체계 구축

이를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매우 다양하다. 단기적으로는 IBS 설비 확산을 통한 에너지 절감과 건물 운영비용 절감, 중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건축환경 조성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나아가 세제 형평성 확보 및 건축산업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 궁극적으로 IBS 관련 조세제도의 개선은 단순한 세금 감면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환경·경제가 조화되는 스마트 사회로의 전환을 실현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본 연구가 향후 관련 입법과 정책 수립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실제 제도 실행을 위한 추가적인 실증연구 및 국제비교분석이 후속 연구로 이어지기를 제안한다.